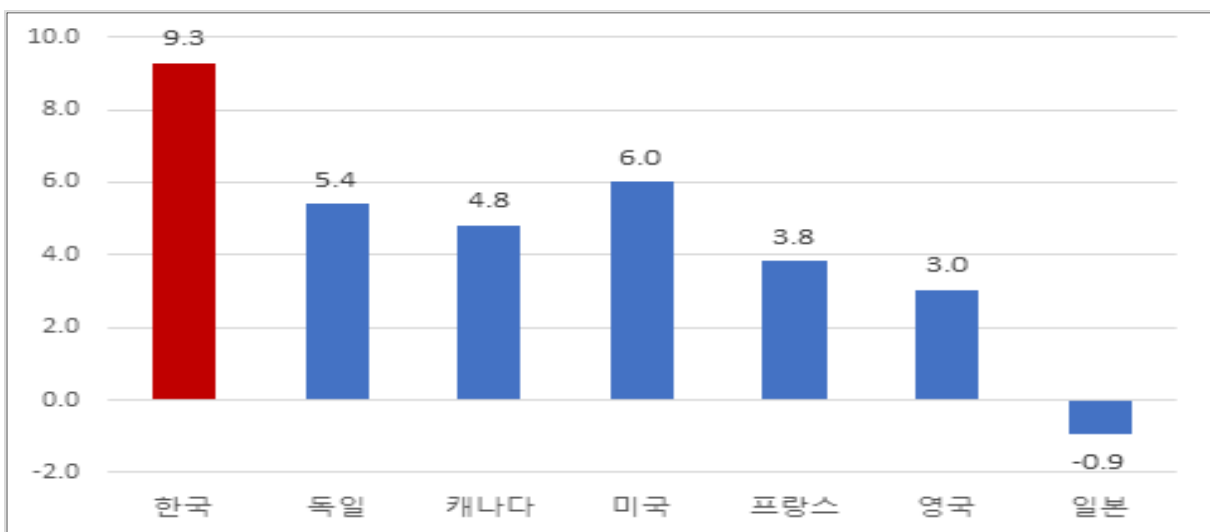


- 靑 정책실장, “집값 폭등 한국만의 현상 아니다” 라며 문정부 부동산 실정 책임 부인 (4/1)
 -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“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내용” 이라며 책임론은 비껴가려는 모습
 - 집값 상승이 주요국 공통적 현상인 건 맞지만 한국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빼놓고 언급한 것은 청와대 정책 수장으로서 매우 비겁하고 부정직한 태도
 - 우리의 2020년 3분기 주택 가격 상승세(전년 4분기 대비 9.3%)는 미국(6.0%), 독일(5.4%) 등 주요 선진국을 압도
 -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은 글로벌 공통 요인(유동성) 외에 한국만의 특수요인(정책 실패)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
 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560억 달러의 추가 재정지출을 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3.4%로, G20 20개국 중 14번째 순위
 - 미국(16.7%), 영국(16.3%), 일본(15.6%), 캐나다(14.6%), 독일(11.0%), 프랑스(7.7%)
- ※ 자료 : IMF, Fiscal Monitor updates (Jan. 2021)

선진국을 압도하는 한국의 주택 가격(2020년 3분기) 상승 속도

단위: 2019년 4분기 대비 증가율(%)



자료: 한국은행, 『통화신용정책보고서(2021년 3월)』 2021.3.11